

점점 못찾은 여야... 예산안 법정 시한 넘기나

처리시한 D-2... 최저임금·공무원 증원 등 이견 팽팽

예산안 파행은 여야 모두 부담... 극적인 합의 전망도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사흘 앞둔 29일에도 여야가 예산안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법정 시한을 넘겨 지각 처리되거나 최악의 경우 준예산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들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쟁점 예산 타결을 시도했다. 여야 3당이 논의한 6대 쟁점 예산은 최저임금 인상, 야당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등이다.

하지만 여야는 핵심 쟁점인 일자리 안정자금과 공무원 증원을 놓고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은 여야 둘 다 양보를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양보 못 한다"고 잘라 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최저임금과 공무원 문제가 목에 걸리는 '보통네'(병목현상)이 될 것"이라며 "우 원내대표에게 '청와대와 (상의)해서 안을 내놓아라. 오지부동으로 해서는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문제와 관련해선 야당도 수당 지급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어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 3당은 정 의장 주재 긴급회동 이후 정책위의장 회동을 이어갔으나 의견 접점을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아동수당·기초연금 측에서 여당이 여지를 준 만큼 공무원 증원·기초연금 인상 지원예산 등 핵심 쟁점에서도 유연한 협상을 해

전체를 일괄 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우선 아동수당 등 의견차가 적은 것부터 집중 협상하자고 맞서며 회동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의제로 올라온 예산은 다 패키지로 봐야 한다. 4~5개에서 의견이 좁혀지더라도 한 개가 안 되면 다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민주당 측에서 공무

원 증원까지 포함해 패키지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면서 협상장을 뛰쳐 나가더라"라며 "만일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여당의 무리한 협상 태도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아동수당 등 일부 사안에 이견을 좁히면서 합의점을 찾지 않느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예산안 파행은 여야 모두 부담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명분과 실리가 보장된다면 극적인 합의에도 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날 '호남 KTX 2단계 사업'에

산 증액에 합의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불씨가 트이지 않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25건의 법안을 내년도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이들 법안은 관련 상임위가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달 1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수정안 발의 입장을 못박고 있어 부수법 처리 역시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우병우, 네번째 검찰 출석 직권남용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순수정보기관 탈바꿈

연내 법 전면 개정

직무 범위 국내 보안정보 삭제

모든 수사권 이관·폐지

심의회 설치해 예산 심사

국가정보원은 29일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국정원법의 연내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해 자체 마련한 국정원법 개정안(대외안보정보원법)에는 기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며, 대공 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정원은 보도자료에서 "정치 관여 등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적폐와의 단절을 통해 오로지 국가안보 및 국익수호에만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진 경향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국민 불법사찰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시대착오적인 이미지와 국내 정보 부서 폐지라는 현실을 고려해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라는 용어와 함께 대공·대정부

전복 개념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과거 대공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 및 최근 증거조작 사건 등 일부 불법적으로 자행됐던 수사방식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국정원이 보유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개정안에서 정보수집 범위를 ▲국외 및 북한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등으로 구체화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또 직무 범위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을 신설하는 동시에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암호부정

사용죄, 군사기밀 보호법·국가보안법상 북한 연계 안보침해행위 등에 대한 정보수집을 직무로 추가했다.

개정안은 반면에 위한 논란이 반복된 국가보안법상 친양·고모죄와 불고지죄의 경우 정보수집 범위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이 예산안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수사업비 등을 심사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불법감청 등에 대한 금지 조항을 신설하도록 해 위법한 정보 활동 등 직무 일탈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이밖에 정치 관여의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조항도 두었다. /연합뉴스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앞 주도권 싸움

비홍 "홍 사당화 우려"...홍 "수령서 견제내니 속해"

다음달 12일 자유한국당 경선을 앞두고 비홍준 대표와 '비홍'(비홍준표) 성향의 원내대표 후보들이 물고 물리는 비탄을 주고받으며 전초전을 벌이고 있다.

우선, 홍 대표의 페이스북을 통한 막말 논란이 이슈로 부상하면서 원내대표 경선에서 비홍 성향의 의원들이 물리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총리직대를 표방하며 경선에 출마한 한선교 의원은 지난 28일 출마선언문을 통해 "모른 척하고 넘기기에 홍 대표의 언사가 도를 넘은 지 오래"라며 "바퀴벌레로 시작해 암 덩어리, 고름이란 막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홍 대표를 맹비난했다.

원내대표 후보군인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홍 대표는 선거 초반부터 겁박과 막말로 출 세우기에 여념이 없다. 보수의 혁신,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홍 대표의 막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홍 대표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홍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사당화 7년 동안 아무런 말도 못하더니만

홍준표 5개월을 사당화 운운하는 사람들 보니 잠으로 기관"이라며 "당이 수렁에 빠질 때는 숨어 있다가 수렁에서 건져내니 이제 나타나 원내대표에 출마하면서 당 대표를 욕하면 의원들로부터 표를 얻을 수 있는가"라고 맞받았다.

29일에도 갈등은 계속됐다. 경선에 나설 이주영 의원은 자신을 겨냥한 홍 대표의 전날 페이스북 글에 대해 "개인적인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려는 정치적 의도라도 있느냐"며 "원내대표 경선에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견제용이나, 대표의 이런 가벼운 처신이 당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과거 자신의 이름을 개명한 사연을 소개하면서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어느 분이 자기 내 이름을 개명해주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라며 이 의원에게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정발위, 100일 활동 마무리

최고위 의결 남겨...당원 권리 강화·특권 내려놓기 긍정평가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가 100일가량의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 짓고 혁신안에 대한 최고위원회 의결을 기다리게 됐다.

정발위는 활동기간 권리당원 도입인 당원자치회 도입, 비례대표 국민심사제 도입, 총선에서 현역의원 경선 의무화 등 파격적인 혁신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지방선거 관련논의는 자체에 출범 당시 우려됐던 당내 분란은 거의 없었다는 평가다. 다만 혁신안 가운데 일부는 당내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어, 실제로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다.

당 혁신기구인 정발위는 '대선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야 말로 혁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라 지난 8월 출범했다.

출범 초기 "추미에 대해 지도부의 '전 정제'를 강화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다",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하는 것 아니다"는 당내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활동이 시작된 후에는 지방선거 룰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고, 당원권 강화와 당

제철개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에 집중하면서 이렇다할 논란은 일지 않았다.

정발위는 그동안 눈에 띄는 혁신안을 다수 발표했다. 자발적 권리당원 도입인 '당원자치회' 제도 도입,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폐지,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시 국민과 당원 투표 결과 반영, 부정부패 사안으로 재보궐 선거 발생시 원안제공사 소속 정당 공천 금지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혁신안 또는 당원 권리 강화, 특권 내려놓기라는 긍정 평가가 있지만 당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데다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가 애초 이달 말까지 예정됐던 정발위 활동기한을 내달 12일까지 늘린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활동 기한이 '지방선거 6개월 전까지'로 규정된 만큼 이를 최대한으로 활용해 당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혁신안에 대한 의결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막자는 것이다. /김형호기자 khh@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대학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특별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1. 21(화) ~ 11. 29(수)

② 전형일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45	2017. 12. 1(금) 오후 2:30

■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2. 1(금) ~ 12. 12(화)

② 전형일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0	2017. 12. 15(금) 오후 2:30
		신학과(Ph.D.)	6	2017. 12. 15(금) 오전 9:40
		목회학과(D.Min.)	2	2017. 12. 15(금)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일반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석사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신학과(Th.M.)	25	2017. 12. 16(토) 오후 2:40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A.)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18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2
예능	음악학과	5
	실용음악학과	4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생이 있는 대학·원생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영산리2길 36